

<div> <div>더불어</div> <div>민주당</div> </div> <div> <div>정책위원회</div> <div>2024.12.12(목)</div> </div>	<div> <div>보도자료</div> <div> <div>담당: 정책위원회 정책실</div> <div>연락처: (02)6788-2606</div> </div> </div>
---------------------------------------------------------------------------------------------------	--------------------------------------------------------------------------------------------------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2024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51건)

-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정기국회에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기로에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무엇보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급식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모든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시키는 법입니다.
 - 노동자 임금채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 ‘농업민생 4법’은 농민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법입니다.
 - ‘모성보호 3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입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순직해병특검법’,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국정·공천개입 등 김건희씨의 불법과 국정농단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할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겠습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목록을 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등 상임위는 본회의 통과 민생법안의 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책임있는 민생민주정당으로서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의 처리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헌정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2024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9.02~12.10)

2024. 12. 12(목)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2024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9.02~12.10}

❖ 민주당 주요법안 51건 본회의 통과

△당론법 14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15건 △여야양당대표회담 8건 등

		법안명	주요내용	
1	운영	국회법	· 예산안 등 자당부의제 폐지	
2		국회증권감정법	· 동행명령제도를 중요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확대 · 자료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3		순직해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순직해병의 억울한 죽음 및 수사외압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당론
4	법사	김건희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당론
5		법원조직법	·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 ·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제 도입, 10년 미만 법조경력자 재판장 제외	
6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 허위영상물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 허위영상물 구성 요건에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 삭제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허위영상물 추가	양당대표 회담 민생공통 공약
7		각급법원설치와관할구역법	·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당론 민생공통 공약
8	법사	채무자회생및파산법	·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당론 민생공통 공약
9		성폭력범죄특례법	·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 특례 확대	양당대표 회담 민생공통 공약
10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안	· 직무 중 직권남용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관련 탄핵 소추	당론
11		검사3인탄핵안 (최재훈, 조상원, 이창수)	· 직무 중 직권남용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관련 탄핵 소추	당론
12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한 내란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	당론
13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강력 촉구 · 혐의자 8명: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육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14	정무	자본시장법	· 공모도 제도 개선: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및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15	교육	고등교육법	·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아침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천원의 아침밥법)	당론
16		초·중등교육법	· 학교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17	과방	정보통신망법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유통금지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파악 및 예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양당대표 회담 민생공통 공약
18		과학기술정책력강화 이공계지원특별법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과 군복무로 연구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근거 설치 · 은퇴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 마련	민생공통 공약
19	국방	군인재해보상법	·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 제공	민생공통 공약
20	행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대통령거부권행사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신설 · 5년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1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당론
21		민방위기본법	· 북한 오물풍선 등으로 발생하는 생명 재산상 침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	민생공통 공약
22	문체	공공디자인진흥법	· 공공디자인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3		한류산업진흥법	·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	
24	농해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직불제 운영법	·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 시행 확대 · 공익직접직불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해양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 국민 간 강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요구 · IAEA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 ·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위반임을 밝히고, IMO에 분쟁 해소 절차 진행 요구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계약생산 강화,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상한 가격 관리, 취약계층 바우처), 가격 폭락 시 생산자 보호 위한 가격 안정제 도입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 지원)	당론
27		양곡관리법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중심에서 밀·콩 등 양곡으로 정책 확대,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 쌀값 하락 시 손실 보전 등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생산자 참여 양곡수급관리 위원회 강화	당론

28		농어업재해보험법	·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 배제, 손해평가사 전문성 제고 및 교체 요구 근거 마련, 보험 심의회 기능 강화(심의 대상에 재해 피해율의 산정 포함, 생산자 의견수렴 의무화 등)	당론 민생 공동 공약
29		농어업재해대책법	·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상에 이상고온·지진 포함,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지원, 복구 지원단 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보험 상품이 없는 피해 농가 보상 대책 수립	당론 민생 공동 공약
30		노인복지법	·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31	복지	의료법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문제 등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3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참여 지원 확대	
33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 지역 장애 아동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운영비용 지원으로 장애 아동 복지 지원 확대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 · 국가기본계획 및 사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	
35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 운행가능 차량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36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금지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에 대해 발주청에 대한 산정기준 준수 의무 부과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청구 간이화 및 기간분할횟수 급여지원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연령 확대 및 기간 등 확대	
38		근로기준법 I	· 육아기 임신기 단축 시간을 연차 산정에 포함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및 급여지원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양당 대표 회답
39		근로기준법 II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 ·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 기준 마련 및 경제적 제재 확대	

			· 상습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 및 출국금지 · 체불 임금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40		고용보험법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보장 확대	양당 대표 회답
41		산업안전보건법	· 폭염현과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등	양당 대표 회답
42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민생 공동 공약
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급발진 대비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	민생 공동 공약
44	국토	새만금특별법	· 새만금 개발공사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 내용 포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돼 특별관리지역과 관련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45		주거기본법	·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도록 함	당론
46		도시및주거환경특별법	· 조합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에 전자적 방식 활용하여 의사결정기간 축소 및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민생 공동 공약
4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보장	민생 공동 공약
48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포함	양당 대표 회답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죄에 대한 처벌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조치의무 강화	양당 대표 회답
50	여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법	· 양육비선지급제도 도입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채무자 등의 없이 소득·재산 등 조회	
51		한부모가족지원법	· 국가나 지자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출생 신고 시 관련 정보 제공 ·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 조사를 여가부·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실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민생 공동 공약